

인류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박 재 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I.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두 가지 착각
- II. 기로에 선 한국경제
- III. 산업사회에서의 성공
- IV. 지식사회로의 이행
- V. 왜 저성장기조인가?
- VI.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 VII. 우리의 대응
- 부록.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금융의 진화

I.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두 가지 착각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다. 한국은 2012-21년 평균 국내총생산(경상미달러표시, 이하 같음)이 1,555.2 십억달러로서 미국(19,281.8 십억 달러), 중국(12,378.0 십억달러), 일본(5,090.0 십억달러), 독일(3,760.0 십억달러), 영국(2,871.2 십억달러), 프랑스(2,694.7 십억달러), 인도(2,414.9 십억달러), 이탈리아(2,016.2 십억달러), 브라질(1,990.3 십억달러), 러시아(1,738.9 십억달러), 그리고 캐나다(1,731.8 십억달러)에 이어서 세계 제12위 경제대국인 것은 사실이다.(산유국 및 비독립국 제외, 이하 같음.)

그러나, 같은 기간 중의 1인당 국민소득(경상미달러표시, 이하 같음)은 한국이 30,356달러로서, 룩셈부르크(116,133달러), 스위스(86,782달러), 노르웨이(83,629달러), 아일랜드(69,538달러), 싱가포르(60,995달러), 아이슬란드(60,839달러), 덴마크(59,801달러), 미국(59,496달러), 오스트레일리아(58,289달러), 스웨덴(55,555달러), 네덜란드(51,106달러), 오스트리아(49,147달러), 핀란드(48,272달러), 캐나다(47,549달러), 독일(45,790달러), 벨기에(45,752달러), 영국(43,710달러), 뉴질랜드(42,565달러), 프랑스(40,377달러), 이스라엘(40,255달러), 일본(40,108달러), 그리고 이탈리아(33,547달러)에 이어서 세계 제 23위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우리가 어떤 한 경제를 평가할 때 그 경제의 국내총생산 규모로 평가할 것인가, 혹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중국이 세계 2위, 인도가 7위, 이탈리아가 8위, 브라질이 9위, 그리고 러시아가 10위라고 해서 우리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한 경제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직접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직접 나타내 주는 1인당 국민소득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라고 강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여 발전을 위한 노력의 고삐를 늦추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경제를 스스로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착각이다. 선진국이란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이어야 한다. 즉, (1)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고, (2) 국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들 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위에서 제시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제1위(룩셈부르크) ~ 제21위(일본) 국가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제 22위인 이탈리아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제 23위인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우며, 국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2012-21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30,356달러로서 선진국 최저수준인 일본의 40,108달러의 75.7%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I. 기로에 선 한국경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을 집행하기 시작한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1954-61년간의 연평균 5.6%로부터 1962-71년간의 연평균 9.9%와 1972-81년간의 연평균 9.0%로 제고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75달러로부터 161달러와 1,058달러로 제고함으로써 후진국권 말단으로부터 중진국권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2-91년간의 연평균 10.4%와 1992-97년간의 연평균 7.7%의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4,029달러와 10,960달러로 제고함으로써 중진국 선두권에 정착하게 되었다.

‘중진국 함정론’에 의하면, 후진국권으로부터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후진국 상태에 비해 개선된 중진국 상태에 만족하여 더 이상 발전의 노력을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중진국권 진입 반세기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 영구히 정체되어 있거나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게 된다. 1960년대 초에 중진국권에 있던 26개국 중 일본과 아일랜드가 1980년대에 선진국권으로 복귀하고,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각각 1990년대와 2010년대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했을 뿐, 이탈리아(33,547달러), 스페인(28,442달러), 키프로스(27,545달러), 포르투갈(21,840달러), 체코(21,333달러), 그리스(19,672달러), 슬로바키아(18,374달러), 우루과이(16,883달러), 헝가리(14,947달러), 칠레(14,808달러), 폴란드(14,474달러), 파나마(13,687달러), 아르헨티나(12,088달러), 러시아(11,939달러), 코스타리카(11,750달러), 말레이시아(10,773달러), 튀르키예(10,576달러) 등 17개국이 중진국권에 정체되어 있고, 멕시코(9,754달러), 브라질(9,660달러), 불가리아(8,707달러), 콜롬비아(6,740달러), 그리고 페루(6,589달러) 등 5개국이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괄호 안은 2012-21년간 연평균 경상미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

1970년대 말엽에 중진국권으로 도약한 한국은, 중진국 함정론에 의하면, 중진국도약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엽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 영구히 정체되어 있거나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게 된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2020년대 말엽 이전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22-31년간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12-21년 미 경상 달러 기준으로 선진국권 최저수준인 40,108달러(일본)를 상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2-31년간 연평균 3.6%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해야 하며, 이 경우 2022-31년간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43,034달러(2012-21년 경상미달러 기준)에 이를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2-71년간 연평균 9.9%, 1972-81년간 연평균 9.0%, 1982-91년간 연평균 10.4%, 그리고 1992-97년간 연평균 7.7%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8~2001년간에는 연평균 5.1%, 2002-11년간에는 연평균 4.6%, 그리고 2012-21년간에는 연평균 2.6%로 급락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를 2022-31년간의 연평균 3.6%로 1%포인트 높이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Ⅲ. 산업사회에서의 성공

한국이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1970년대 말엽에 중진국권으로 도약하고 1990년대 말엽에 중진국 선두권에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경제체질을 확립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60~1980년간의 인류사회는 산업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생산과정의 각 부분에 특화하여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따라서, 기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그것을 자연자원 및 인간 노동과 결합하는 기술이 인류사회 경쟁력의 물적 원천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각자가 특화한 업무의 절차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억력과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근면성이 인류사회 경쟁력의 인적 원천이 됐다. 기억력과 근면성이 합쳐진 실행력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경제체질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경제체질이라 함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능력,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을 말한다.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의 물적 원천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천부의 기억력에다 근면성을 보태서 실행력이 강한 경제체질을 만들어 경쟁력의 인적 원천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출진흥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본래 기억력이 강한 경제체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0년대 말엽까지만 해도 음주와 도박을 일삼는 나태한 경제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정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도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국의 경제체질은 천부의 강한 기억력에다 근면성이 보태어져서 실행력이 강한 경제체질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수출진흥을 통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Ⅳ. 지식사회로의 이행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된 컴퓨터가 1980년대에 이르러 개인용 컴퓨터의 형태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자 인류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 든 후 컴퓨터가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게 되자 지식사회는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은 이제 기계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가 생산 활동에 이용되게 됨으로써 종래의 자본과 기술에 정보를 추가하여 경쟁력의 물적

원천의 하나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 즉 정보력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창의력이 경쟁력의 인적 원천으로서 요구되고, 경쟁이 매우 심한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의 정보력과 창의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다른 사람과 힘을 모으는 능력, 즉 협력력이 또한 경쟁력의 인적 원천의 하나로 되었다. 정보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력이 합하여 지식력을 구성하고, 지식력이 종래의 실행력에 추가하여 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인적 원천으로 된 것이다.

지식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20세기 말엽부터 컴퓨터로 인해 시작된 인류생활의 혁명은 산업사회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사회를 지식사회로 바꾸는 '지식혁명'이라는 사실이다. Klaus Schwab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6)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보급으로 인한 혁명을 각각 3차산업혁명과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이들 혁명이 인류사회를 지식사회로 바꾸는 혁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V. 왜 저성장기조인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62-71년간의 연평균 9.9%, 1972-81년간의 연평균 9.0%, 1982-91년간의 연평균 10.4%, 그리고 1992-97년간의 연평균 7.7%로부터 1998-2001년간의 연평균 5.1%, 2002-11년간의 연평균 4.6%, 그리고 2012-2021년간의 연평균 2.6%로 급락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체질이 인류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혁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부터 시작된 지식사회에서는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력으로 구성되는 지식력이 경쟁력의 인적 원천으로서 요구되지만, 한국의 경제체질은 이들 모두에 있어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인당 핸드폰 보급률이 1.25로서 미국의 0.75보다 현저히 높지만 보행 도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정보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정보력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인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습관화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적을 철저히 배제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희생하기까지 하는 성향을 지님으로써 협력력의 한계에 봉착하는 등 지식력이 태만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공휴일의 수가 세계 11위에 이르는 등 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의 인적 원천의 하나였던 근면성에 있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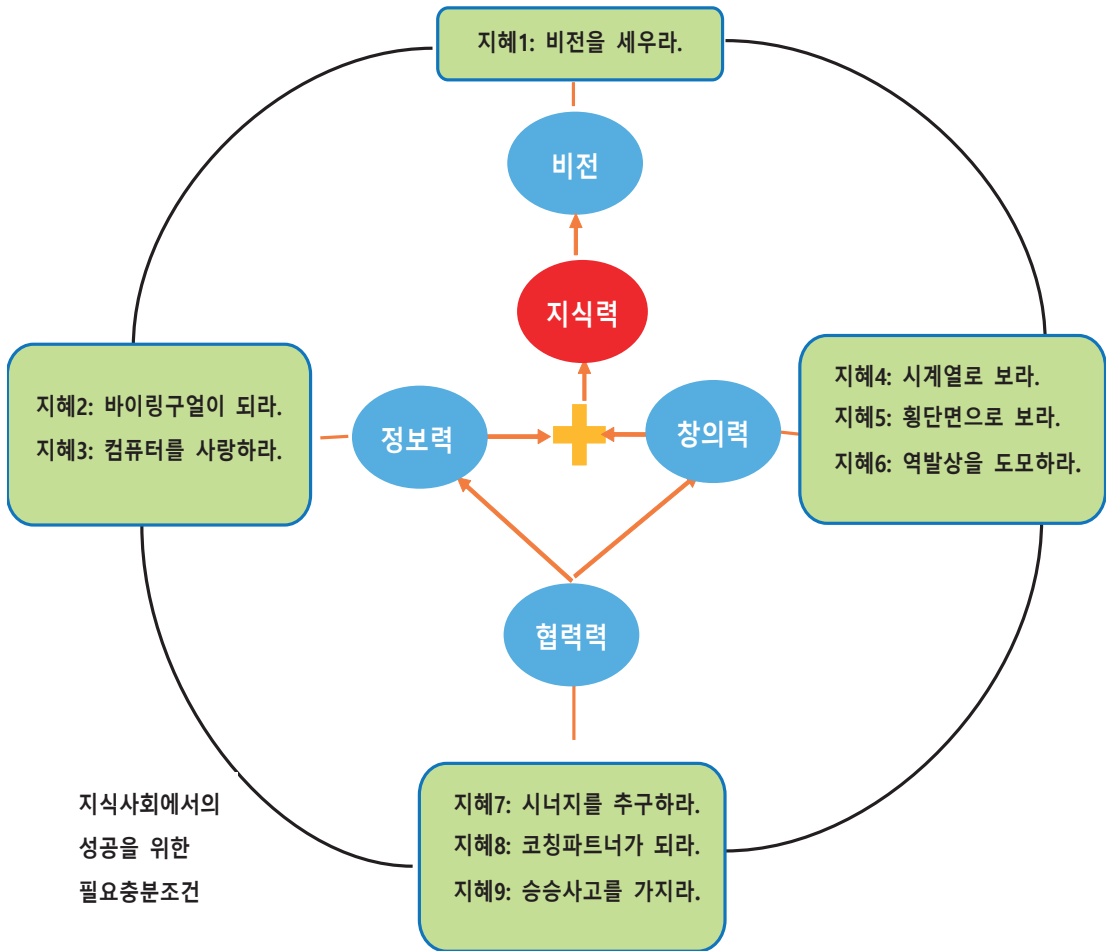
최근에 이르러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질이 이같이 새로운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경제체질로 혁신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VI.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인류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중진국권 도약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엽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이 종래의 실행력을 회복·유지하고 지식력이 새롭게 배양·강화되는 경제체질로 혁신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2012-21년간의 연평균 2.6%로부터 2022-31년간의 연평균 3.6%로 제고돼야 한다.

특히, 한 경제의 지식력을 배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체와 금융기관들의 구성원들과 정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개인들이 아래의 <그림: 지식사회지혜모형>에서의 9가지 지혜를 터득하고 체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박재윤, 『혁신지식 -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9가지 지혜』, 한국경제신문, 2014)

그림: 지식사회지혜모형



출처: 박재윤, 『혁신지식』, 한국경제신문, 2014

첫째, 인생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지혜1: 비전을 세우라). '맹인이 되는 것보다 유일하게 더 나쁜 것은 시력을 가졌지만 비전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비전이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일생 동안의 사명(역할)을 설정하고 사명의 수행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원칙)를 제시하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정보력을 배양·강화해야 한다. 먼저 전 세계 정보의 85% 이상이 모국어 외에 영어로도 표현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영 바이링구얼이 돼야 한다(지혜2: 한·영 바이링구얼이 되라). '단일언어가 우리를 인생의 복도에 세워준다면 복수언어는 그 복도의 모든 문들을 열어 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영어방송을 청취함으로써 한·영 바이링구얼을 생활화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지혜3: 컴퓨터를 사랑하라). '컴퓨터의 기능은 사용자에게 따라 달라진다.' 컴퓨터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컴퓨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컴퓨터윤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의력을 배양·강화해야 한다. 먼저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시계열로 접근해야 한다(지혜4: 시계열로 보라).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항상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인간이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조직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여건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지금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여건하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횡단면으로 접근해야 한다(지혜5: 횡단면으로 보라). '글로벌하게 접근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경쟁사들, 특히 선진국들의 경쟁사들이 어떠한 여건하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여건하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역발상을 도모해야 한다(지혜6: 역발상을 도모하라). '새로운 발상구도를 포용하는 과학자는 해석자라기 보다는 거꾸로 보는 렌즈를 낀 사람과 같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땅이 사과를 끌어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처럼 모든 주어진 과제에 대해 발상구도를 뒤집어서 접근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접근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끝으로, 협력력을 배양·강화해야 한다. 먼저 동급자와는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지혜7: 시너지를 추구하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현명하지는 않다.' 동급자와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차이를 활용하며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하급자 간에는 코칭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지혜8: 코칭파트너가 되라). 상급자는 코치가 되고 하급자는 선수가 되어서,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을 코치가 지지하고 후원해 줌으로써 선수와 코치의 잠재력이 모두 발휘되게 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코치는 선수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승승사고를 가져야 한다(지혜9: 승승사고를 가지라). '친구를 가까이하되 적을 더 가까이하라.' 승패사고, 패패사고, 그리고 패승사고는 모두 패패의 결과를 가져오며 경쟁자와도 항상 어느 선까지는 서로 협력하여 전체의 떡을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선까지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전체의 떡을 크게 하여 각자가 조금씩 더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VII. 우리의 대응

인류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고, 한국이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이나 혹은 중진국 함정에의 매몰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실물기업 및 금융기업 포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비전을 공유하라. 조직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대외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야 한다. 비전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을 말하며, 사명(조직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과 가치(사명의 수행을 위해 지켜나갈 원칙), 그리고 전략(가치를 지키면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기본계획)으로써 구성된다.

둘째, 지식경영을 도입하라. 지식경영이란 지식력을 조직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조직의 지식력을 극대화하고 활용하는 경영을 말하며, 제1단계: 지식인지(지식력의 중요성을 인식), 제2단계: 지식조직화(조직구성과 업무절차 개편), 제3단계: 지식네트워킹(내외부간, 조직부서간 네트워킹), 제4단계: 지식보상(승진, 급여, 스톡 옵션 등 유인 제공), 제5단계: 지식제고(연구개발과 훈련에의 투자), 제6단계: 지식기업(성장전략 및 경쟁전략 확립)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파트너링리더십을 확립하라. 지식력은 리더의 지시·통제와 팔로워의 수명·추종이 불가능하므로 조직의 리더십을 리딩리더십(끌고가는 리더십)으로부터 파트너링 리더십(함께하는 리더십)으로 바꾸어서 리더의 지지·후원과 팔로워의 자신·주도를 리더십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리더가 코치가 되고 팔로워가 선수가 되는 코칭리더십이 유용한 파트너링리더십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끝으로, 9가지 지혜로 무장하라. 위에서 제시한 지식사회지혜모형의 9가지 지혜를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배양·발휘하게 해야 한다. 실물기업들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전경련 등이 회원사들의 구성원들에게, 금융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단체들이 회원사들의 구성원들에게, 정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각급 정부교육기관들이 대상 피교육자들에게,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비정부조직들(NGO)이 행정복지센터의 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9가지 지혜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록 :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금융의 진화

세계경제위기10년주기설

글로벌금융위기(2008-2009)가 종식된 지 10년만인 2019년 12월 세계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위기에 빠짐으로써 인류사회는 '세계경제위기10년주기설'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 2차오일쇼크(1979-81), 일본경제위축(1990), 아시아외환위기(1997-98), 글로벌금융위기(2008-09), 그리고 코로나경제위기(2019-) 등의 세계경제위기가 거의 10년 주기로 인류사회를 덮쳐 온 것이다.

1979-81년의 2차오일쇼크는 이란이 1978년 12월의 이란혁명 이후 일일 6백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2백만 배럴로 축소하고 배럴당 13달러이던 원유가격을 20달러로 인상한 이후 1981년 1월의 39달러에 이르기까지 인상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률을 1977-79년 간의 연평균 4.1%로부터 1980-82년간의 연평균 1.4%로 급락시키고, 세계인플레이션율(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상승률, 이하 같음)을 1976-78년간의 연평균 9.5%로부터 1979-81년간의 연평균 11.9%로 상승시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9년의 8.7%로부터 1980년의 -1.6%로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율은 18.5%로부터 24.7%로 폭등했다.

1990년의 일본경제위축은 1980년대 말 자산가격 거품을 우려한 통화정책의 긴축과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독일로의 자금이동 등이 1990년 일본의 자산가격 폭락을 초래

함으로써 시작되어,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988-90년의 5.5%로부터 1991-93년의 1.3%로 폭락시켰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86-88년간의 연평균 0.3%로부터 1989-91년간의 연평균 2.8%로 폭등시켰으며, 세계경제 성장률을 1988-89년간의 연평균 4.2%로부터 1990-91년간의 연평균 2.2%로 폭락시켰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을 같은 기간 중에 6.7%로부터 8.0%로 급등시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88년간의 연평균 12.4%로부터 1989-90년간의 연평균 8.5%로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율은 1988-89년간의 6.6%로부터 1990-91년간의 연평균 9.8%로 급등했다. 일본경제위축이후 일본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1991-2000)'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30년'의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

1997-98년의 아시아외환위기는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부족으로 인해 시발되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부터의 격심한 자본이탈을 촉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대미 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주식 및 기타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민간부채가 대폭 증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1997년의 3.9%로부터 1998년의 2.8%로 급락하고 세계인플레이션율이 1994-96년간의 연평균 8.2%로부터 1997-99년간의 연평균 4.6%로 폭락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1995-96년간의 연평균 8.8%로부터 1997-98년간의 연평균 0.6%로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1994-96년간의 연평균 6.4%로부터 1997-99년간의 연평균 2.4%로 폭락했다.

2008-09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미국에서의 저소득층 주택구입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탈적인 대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의한 과도한 리스크테이킹, 그리고 미국내 주택버블 폭발 등으로 증시가격이 폭락하고 2008년 9월 15일의 리먼 브러더스에 이은 세계적인 증권회사들의 파산들로 인해 발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6-07년간의 연평균 4.5%로부터 2008-09년간의 연평균 0.4%로 폭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2007년의 연평균 5.8%로부터 2008년의 7.9%로 폭등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2006-07년간의 연평균 5.6%로부터 2008-09년간의 연평균 1.9%로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1.1%로부터 3.2%로 폭등했다.

2019년부터의 코로나경제위기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첫 환자가 발견된 후 2022년 10월 3일 현재 전세계에서 654만명이 사망하는 등 인류 생활의 일상을 파괴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2.6%로부터 2020년의 -3.3%로 폭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2018-19년간의 연평균 2.6%로부터 2020-21년간의 연평균 3.0%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2019년의 2.2%로부터 2020년의 -0.7%로 급락하고, 같은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율이 -0.8%로부터 1.3%로

급등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해야 할 이론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경제위기10년주기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매 10년 단위로 국내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세계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주의로부터 경제안보주의로

21세기 초엽 이후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자유주의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 특히 중국의 패권의식 발로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는 종래의 자유주의로부터 새로운 안보주의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안보주의의 시발은 2013년 9월부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대'의 이름아래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서유럽에까지 이르는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로'의 이름 아래 중국으로부터 인도양 및 태평양을 통과하여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까지 이르는 항로를 개발함으로써 참여국들의 무역을 진작하는 것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유럽지역 및 아시아지역에의 경제적 진출을 진작하고자 한 것이었다. 2022년 8월 현재 149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세계,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총생산을 진작하는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참여국들에게 인권침해, 환경악화, 국가부채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신식민주의적 혹은 신제국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의 일대일로는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안보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2019년 12월에는 EU가 '유럽그린딜'을 발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총 1조 유로를 투자하고, 같은 시점에 독일이 '국가산업 전략 2030'을 발표하여 산업경쟁력의 확보 및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2020년 3월에는 중국이 '신인프라 건설'을 제시하여 통신, 인공지능 등 7대 인프라 분야를 선정하고 21조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밝히고, 2021년 10월에는 영국이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여 수소, 해상풍력, 원자력 등에 2037년까지 6,5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임을 밝히고, 2021년 11월에는 미국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발표하여 국가기반시설의 재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의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안보주의는 2022년 8월 미국이 '반도체생산유인및과학법(CHIPS &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극에 다다르고 있다. 반도체생산유인 및 과학법은 (1) 반도체생산유인, (2) 연구개발, 경쟁 및 혁신, 그리고 (3) 대법원안보자금조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에 신규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들 수혜기업들의 중국 및 비우호적 국가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안보주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내 처방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강화하면서 국내 에너지 생산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하는 경우와 배터리 소재의 40%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는 경우, 그리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안보주의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경제안보주의는 상당기간동안 세계경제여건의 주류를 이루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해 가지 않을 수 없는 한국 경제는 상당기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경제안보주의에 부응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주의의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 등 해당국가들에게 강력히 섭외함으로써 경제안보주의로부터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의 진화

오늘날 금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분권화(decentralization)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integration)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준비자산 및 안전자산이 분권화되고 있다. 1999년 1월 1일, 11개 유럽연합(EU)의 역내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달러화가 유일한 국제적인 준비자산 및 안전자산이었지만, 유로화가 도입된 후 국제적 준비자산 및 안전자산은 달러화와 유로화로 분화되기 시작했고,

중국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위안화도 국제적인 준비자산 및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준비자산 및 안전자산의 분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둘째, 화폐가 분권화되고 있다. 디지털화폐로서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한 이후 아직 화폐로서 정착화되지 못했지만, 이들 디지털화폐의 거래운리가 확립되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면, 기존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기존 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융중개가 분권화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거대 IT기업들이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기업들로부터 거대 IT기업들에게로 분권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금융기업들이 IT를 이용하여 핀테크(fintech)를 제공하고 거대 IT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업에 진출하여 테크핀(techfin)을 제공함으로써 핀테크와 테크핀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양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테크는 규모, 브랜드, 신뢰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테크핀은 디지털 인프라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핀테크는 자본의 규모와 규제적응력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테크핀은 혁신마인드와 적응력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핀테크는 영업마인드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테크핀은 소비자위주의식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경쟁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어떤 평론가는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거대 IT기업들은 디지털 진취성, 거대 고객기반, 고객지향적인 조직, 기업 브랜드, 은행업으로 확장하기에 충분한 신축성 등 많은 성공의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 전통적인 은행에서 볼 수 없었던 신뢰를 일부 IT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 비전통적 금융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들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 핀테크기업들이 더 빠른 말을 만들고 있다면, 테크핀 기업들은 비행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 경쟁자들은 은행 영업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공익사업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Jim Marous, Forbes, 2018.8.27)

금융은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분권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변화 및 기술발달로 선진국들 및 신흥개도국들에 있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금융적 상호연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흥개도국들에 있어서 금융적 포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기술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과 기업 간의 연결이 확산되고 있다. 신기술의 발달 및 신뢰의

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상점 간에 거래계정이 개설되어 자금 송부 및 수취가 용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금융의 진화과정은 실물기업과 금융기관 양측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와 테크핀이 대립하여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업하여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금융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응

이상의 본문 및 부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사회는 20세기 말엽부터 지난 20여 년간 종래의 산업사회로부터 새로운 지식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질서는 금융의 진화를 계속하면서 21세기 초엽부터 종래의 경제자유주의로부터 경제안보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위기 10년 주기를 2030년대 말엽에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말엽이면 중진국 도약 반세기를 맞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2030년대 말엽 이전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 등 모든 조직들이 본문에서 제시된 '우리의 대응'을 하루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과 정부조직들이 (1)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게 만들고, (2)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3) 파트너링리더십을 확립하며, (4) 모든 구성원들을 지식사회지혜모형의 9가지 지혜로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